

## 중학 상위 5% 인재 떠나고 산업계엔 '두뇌' 없이 손발만

### 호남, 상생이 미래다

민선 6기  
광주일보의 제안

#### <4부> 지역인재를 키우자

- ① 브레인인 없다
- ② 교육 네트워크가 답이다
- ③ 포스트 DJ 키워야

### 전남대 경쟁력 잃어 유출 심화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중학교에서 고교 진학 때, 고교에서 대학 진학 때,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도, 지역 인재 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을 따라 지역의 재부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한 번 광주를 떠나면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떠난 인재들을 묶어놓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리조차 빈약하다.

김완기 남도속원장은 "인재 유출은 호남의 몰락을 부채질한다"면서 "인재 유출을 막을 대책과 함께 곳곳에 있는 호남의 인재들을 묶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5% 인재 포기= "상위 5%의 최우수 인재를 포기하는데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놀랍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전문가의 얘기다. 광주 출신인 이 전문가는 중학교 상위 5%내 최우수 인재 100명가량이 매년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광주를 빠져나간다고 진단했다.

주로 상산고·대원외고 등 자사고(자유형사립고)와 특목고다. 광주시교육청도 최상위 중학생 120명가량이 해마다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왜 광주를 떠나는 걸까?

상위 5%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광주가 이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학교교육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 일반고에 진학하면 학교 수업만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 학원을 병행해야 하고, 자사고로 보내자니 교육당국과의 갈등

탓에 불안해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금 버겁더라도 타 지역의 자사고·특목고로 눈을 돌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주장이다.

◇경쟁력 잃은 지역대학= "20년 전, 대입원서를 쓸 때 전남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 다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 중위권에 포진한 일명 '삼국대'보다도 훨씬 처져요." 고3 진학교사가 들려주는 고3 교실에서의 전남대 위치다.

전남대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남대의 추락은 조선대 등 모든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두 단계씩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교사들은 전남대 추락의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집중화'를 들었다. 취업의 문이 서울지역 대학으로 집중되다보니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몰렸다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안일한 대응'을 들었다. 서울 중위권 대학들이 입학처에 힘을 실으며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때 전남대는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참담한 순위 역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약 계열 등 지역 대학의 주요학과는 외지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머리는 없고 손발만= 지역 산업계도 브레인인 없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기능은 수도권으로 올려보낸 채 생산기지만 지역에 남겨두고 있다. 유능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9월 광주 공장에 있던 중앙연구소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했다. 이유는 지방에 있으면 우수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소수의 군수차량 인력을 빼면 아예 연구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만이 냉장고 등 연구인력을 광주에 두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을 둔 지역에 R&D 우수 인재들이 없다는 점은 지역산업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A중소기업이 기술부족으로 제품 개선에 어려움을 겪다 대학과의 기술교류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감안하면 연구인력의 지역 부재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내일 7·30 재보선 "우리가족 꼭 투표할게요"



7·30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8일 광주시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완동 롯데마트 앞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호남고속철 전력선 입찰도 담합

### 경찰, 8개 업체 27명 입건, 중국산 저가 전선 납품도

#### '비리 백화점' 오명 ... 지역민들 안전성 우려의 목소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50억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에 참여한 전선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내년 초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레일 납품 논란과 전력선 입찰 담합 등 각종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5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납품 입찰에 참여한 국내 전선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하고 전선회사 입

찰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진전기·LS전선·넥스스코리아·대한전선·호명케이블·가온전선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쟁입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낙찰 받을 업체와 둘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낙찰사가 납품해야 하는 물량을 업체들이 서로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분배했다. 또 일진전기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전선을 수입해와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 순천·곡성 '박빙의 승부'

4만5천표 얻어야 당선 ▶7면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 이용부 보성군수 ▶11면

### "주민세 두 배 인상"

광주시, 4500원→1만원 예상

부터 일진전기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차익이 55억원 가량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납품 전 이뤄지는 성능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능검사의 일종인 불가분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 직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소량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저가 중국산 전선을 납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초 검찰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이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해왔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0일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과 모암터널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율이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낮은 0.13~0.64로 파악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8조 3500억원에 이르고 내년 3월 초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435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 전신·남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광주는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